

4.27 전세사기 종합대책 정부발표안 평가

-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였다.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피해임차인들의 긴박한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어 조속히 구제되기를 기대한다.
- 다만 정부안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첫째, 피해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절차가 복잡한 데 대해 우려한다.
전세 ‘사기의도’ 등 6개 요건을 다 갖춘 경우만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200여채만 전세사기 기소가 이뤄진 미추홀구의 경우 나머지 피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보증금 보전방안이 빠진 것은 큰 문제점이다.
4.14일 20대 사망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이 9천만원이고 3,400만원이 우선변제 가능한데도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피해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이 채무인 경우의 피해자들도 구제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우선매수청구권의 실효적 행사를 위한 채무변제나 추가대출 방안이 없는 점은 문제이다. 법안 논의과정에서 보완돼야 하겠다.
넷째, 매입임대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역시 미흡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특별법을 제출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늦게나마 수용한 데 대해 평가하며, 해당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서 관련 법률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심의, 처리해나갈 것을 밝혀둔다.
- 이번 정부 발표의 미흡한 점들은 국토 소위 심의과정에서 극복되도록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와 협조를 바란다. 아울러 특별법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한다.

2023. 04. 27.(목)